아 산 정 책 연 구 원

이슈브리프

No. 2026-20

미국의 시각에서 본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과 한국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정구연

객원연구위원

2026-07-02

지난 5 월 14 일(중국 현지시간 기준)의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이 전략경쟁의 상황을 인정하며 그러한 경쟁이 군사적 충돌이나 전면적 경제 디커플링으로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하려 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공정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에 합의했다는 팩트시트를 공개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비민감 분야에서의 협의는 유지하려는 접근법을 보여준다.[1]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 결과를 일방의 양보 혹은 관계 개선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회담 이후에도 희토류, 반도체, AI칩, 대만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실질적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농산물과 같은 비민감 상품 분야에서는 교역 목표를 조정하려 했지만, 엔비디아 H200 등 첨단 AI칩의 대중 수출 문제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으며, 전략기술 분야의 광범위한 관세와 수출 통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2]

요컨대 이번 정상회담은 '갈등 완화'보다 '경쟁 관리'의 성격이 강하다. 상호 충돌 비용이 너무나 커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경쟁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산업정책, 첨단 기술 추격, 공급망 장악을 전략적 도전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와 동맹 네트워크 강화를 자국 발전 권리에 대한 제약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중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분리된 관계라기보다, 경제협력조차 안보적 고려 속에서 조정되는 복합경쟁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 직전 중국이 제시한 '4대 레드라인'은 미중 경쟁이 완화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중국 측은 회담을 앞두고 대만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 경로와 정치체제, 중국의 발전 권리를 미국이 도전해서는 안 될 지점으로 제시했다.[3] 이는 중국이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정치체제, 기술 및 산업발전 문제까지 주권 및 체제안정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대만 문제는 양국 갈등의 핵심이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회담 전후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 문제를 시진핑(Xi Jinping) 주석과 논의했다고 밝혔고, 시 주석 역시 대만 문제가 미중관계의 가장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했다.[4] 한편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 논의했다는 점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태도이며, 대만 방어에 대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역내 동맹국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대만 문제가 미중 정상 간 거래와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공식적인 정책변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트럼프식 거래외교가 대만 안보공약의 신뢰도를 약화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대만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6월 2일 상원 청문회에서도 대만해협의 현상유지를 원하며 정책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한 바 있다.[5]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중 경쟁은 군사안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 공급망, 무역, 투자, 가치문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AI, 첨단 제조 공급망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미동맹과 대중 경제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미중관계가 관리 국면에 진입했다고 해서 한국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경쟁이 제도화될수록 한국은 어떠한 사안에서 협력하고, 어떠한 사안에서 거리를 둘 것인지, 독자적 역량은 어떠한 영역에서 강화할 것인지 더욱 세심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경쟁이 결코 쉽게 끝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 경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장기화될 것인지를 보여줬다. 양국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모색하고 있지만, 동시에 각자의 핵심 이익과 레드라인은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의 과제는 이러한 관리된 경쟁 관계 속에서 단순히 선택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미중관계의 구조를 읽어내고 자신의 전략적 공간을 능동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회담의 주요 결과와 그 함축성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는 크게 두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하나는 양국이 관계 악화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축과 정상간 소통을 복원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만 문제, 첨단 기술, 희토류, 관세, 공급망 등 핵심 쟁점에서는 실질적 타협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었다기보다, 경쟁을 관리하려는 시도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합의는 양국이 미중관계를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로 관리하겠다는 표현을 공유했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초한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시 주석의 가을 워싱턴 방문과 양국의 G-20, APEC 회의 개최 지원도 언급했다.[6] 중국 외교부 역시 양국 정상이 "건설적인 미중 전략 안정 관계"라는 새로운 비전에 합의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향후 3년 이상 미중관계를 이끌 전략적 지침으로 제시했다.[7]

그러나 양측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의미를 동일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이를 무역과 투자, 공급망 문제를 협상 가능한 영역으로 관리하는 실용적 틀로 해석한 반면,

중국은 경쟁을 '적절한 한계' 안에 두고, 상호 핵심 이익과 발전 경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정치적 원칙으로 해석했다. 왕이(Wang Yi) 외교부장은 전략적 안정이 경쟁을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지 않고, 차이를 관리하며, 각자의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 및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8] 이는 '안정'이라는 같은 표현에서도 미국은 거래와 관리, 중국은 지위와 규칙의 인정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정한 합의가 있었다. 양국은 비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을 조정하기 위한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와 투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설치에 합의했다. 백악관은 이 협의체들이 비민감 상품 교역과 투자 관련 사안을 다루는 정부 간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중 양측이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능성을 검토하는 공동 협의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9]

이 합의의 의미는 미중 경제관계가 전면적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가기보다, 민감 영역과 비민감 영역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재조정되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은 첨단 반도체, AI, 핵심 광물, 군사전용 가능 기술 등 전략 부문에서는 경쟁과 통제를 유지하되, 농산물·항공기·일부 소비재 등 상대적으로 안보 민감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거래를 유지하려 한다. 중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비전략 부문에서의 양국 교역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주도 경제발전모델 자체를 바꾸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제 영역에서의 합의는 제한적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와 농산물 구매를 회담 성과로 강조했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신중했다.[10]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발표가 당초 기대보다 작은 규모였고, 농산물 구매 합의도 세부 내용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 역시 이번 회담 이후 중국의 정치·경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개혁을 기대하기보다는, 관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관리무역' 접근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첨단기술 영역에서는 실질적 합의가 거의 없었다. 특히 엔비디아 H200 등 첨단 AI 칩의 대중 수출 문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관심사였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CEO가 방중단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H200 AI 칩 수출과 관련한 합의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AI와 반도체가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니라 군사력, 산업 경쟁력, 데이터 권력과 연결된 전략기술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 문제도 부분적으로만 논의됐다. 백악관은 중국이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자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수출 통제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11] 이는 중국이 희토류를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안보 분야에서 핵심 의제는 대만 문제였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규정했고, 이를 잘못 처리할 경우 양국이 충돌 또는 갈등으로 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칭했으며, 미국이 이를 "특별히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들었지만 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대만 무기 판매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요컨대 미국은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중국은 오히려 대만해협의 '전략적 안정'이라는 프레임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이러한 접근법은 전반적인 미중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거래적 조정이었으나, 대만을 협상카드처럼 다룬 만큼 중국 쪽에 양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됐다.

이처럼 이번 정상회담은 합의보다 관리의 성격이 강했다. 양국은 무역·투자 협의체와 정상 간 소통을 통해 충돌 위험을 낮추려 했지만, 첨단기술, 핵심 광물, 대만 문제에서는 양국 모두 양보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번 회담의 결과는 미중관계가 안정화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안정한 경쟁을 관리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즉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 경쟁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양측이 경쟁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실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2]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미중 간 일부 경제협의가 재개되었다고 해서 한국의 전략 환경이 단순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민감 경제 영역에서는 거래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반도체·AI·희토류·공급망·대만 문제와 같은 민감 영역에서는 경쟁이 더 제도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러한 이중 구조 속에서 미국과의 안보·기술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한다.

정리하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관리였다. 미중 양국은 관계 악화를 방지할 제도적 통로를 마련했지만, 경쟁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미중관계의 전환점이라기보다, "관리된 경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미중 정상외교의 역사와 미국의 대중국 접근법 변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냉전 이후 미중 정상외교가 변화해온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미중 정상외교의 기본 방향은 중국을 국제질서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 미중관계는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됐고, 최근에는 경쟁을 전제로 충돌을 방지하는 '관리된 경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표 1] 미 행정부별 미중정상회담의 기조와 목표

행정부	주요 정상회담 및 합의	목표	전략적 의미
클린턴 행정부 (1993-2000)	▪ 1997 년 클린턴-장쩌민 정상회담[13]	건설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 중국을 고립시키기보다 국제질서에 편입시키려 시도.
부시 행정부 (2001-2008)	▪ 2001 년 부시-장쩌민 정상회담[14]	책임있는 이해당사자[15]	▪ 중국이 국제질서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한다고 요구. ▪ 9.11 이후 대테러 협력.

오바마 행정부 (2009-2016)	▪ 2013 년 서니랜드(Sunnylands) 정상회담	협력과 경쟁의 병존	▪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제안. ▪ 미국은 협력가능성은 인정하되 중국 중심 세력권 인정은 거부.[16]
트럼프 1 기 행정부 (2017-2020)	▪ 2017 년 마라라고 정상회담·베이징 정상회담 ▪ 2018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담	전방위 전략경쟁	▪ 미중 갈등이 무역 수지 문제를 넘어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사업정책, 공급망 문제로 확대. ▪ 2017 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현상변경국가(revisionist)로 규정. ▪ 2020 년 Phase On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를 통한 무역 갈등의 부분적 봉합 시도.[17]
바이든 행정부 (2021-2024)	▪ 2022 년 발리(Bali) 회담[18] ▪ 2023 년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 회담[19]	가드레일 경쟁	▪ 미국은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면서도,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 ▪ 2022 년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능력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고, 발리 회담에서는 경쟁이 충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
트럼프 2 기 행정부 (2025-현재)	▪ 2026 년 베이징 정상회담	건설적 전략적 안정성	▪ 양국은 경제·기술·안보 리스크를 협의체와 거래를 통해 관리하려 시도.[20]

[표 1]은 미중관계가 더 이상 중국의 '변화'를 기대하는 관여정책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클린턴·부시 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중정책은 중국이 국제질서에 편입된다면 점진적으로 국제규범을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이후 미국은 중국이 현재의 국제질서 속에서 발전했지만, 그 질서를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재구성하려 한다는 판단으로 전환됐다.

바이든 시기의 '가드레일' 접근은 이러한 전략경쟁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의 장기화를 전제로 했다. 다만 경쟁이 군사적 충돌이나 전면적 경제분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교·군사·경제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최근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등장한 '건설적 전략 안정' 역시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 다만 차이는 바이든 시기의 가드레일 경쟁이 규범과 동맹 조율을 강조했다면, 최근 회담은 거래와 협의체를 통한 문제 관리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는 양국 관계 개선보다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는 시도에 가깝다. 양국은 경쟁의 기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그 경쟁이 통제 불가능한 위기로 고조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미중관계가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경쟁이 더 정교하게 관리되고 제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4대 레드라인과 미국의 반응

이번 정상회담을 이해하는 데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중국이 제시한 '4대 레드라인'이었다. 중국은 이미 2024년 11월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리마(Lima) 회동에서 대만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중국의 발전 경로와 정치체제, 중국의 발전 권리를 미중관계에서 도전받아서는 안 될 네 가지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네 가지 사안이 미중관계의 '가장 중요한 가드레일이자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21] 미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네 가지 레드라인을 모두 문제삼기보다 경쟁의 범위와 강도를

협상하는 방향으로 접근법을 조정했다. 네 가지 레드라인은 미중 경쟁이 단순한 무역분쟁이나 군사적 세력경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첫째, 레드라인인 대만 문제는 중국이 주권과 영토완정의 문제로 간주하는 핵심 사안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를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미중관계가 '위험한 곳'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만 정책이 변하지 않았으며 대만해협의 일방적·강제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대만 지원의 원칙을 폐기한 것은 아니나, 그 구체적인 집행 시점을 미중 정상간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둘째,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는 중국에게 단순한 가치 논쟁이 아니라 체제 정당성의 문제다.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규범 외교의 핵심 언어로 사용해 왔고, 중국은 이를 내정간섭 또는 체제 압박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레드라인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중국이 미중 경쟁을 체제 안정과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인권을 중국체제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규범적 의제로 다루기보다, 특정 인물의 석방을 요구하는 개별적·거래적 의제로 다루었다. 즉 체제 압박의 의제에서 정상간 교섭의 의제로서 그 활용방향이 바뀐 것이다.

셋째, 발전 경로와 정치체제 문제는 중국 공산당 통치체제의 정당성과 연결된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정치체제나 발전모델을 문제 삼는 것을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정권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 이는 미중 경쟁이 특정 정책의 갈등을 넘어 정치체제의 정당성 경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의 우월성과 동맹국 결속을 강조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을 '위대한 지도자,' 중국을 '위대한 국가'라고 평가하며 양국의 공존과 협력을 강조했다. 즉 체제경쟁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희석시킨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발전 권리'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 기술·산업 경쟁을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중국이 발전 권리를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첨단 AI 칩 제한, 공급망

재편, 핵심 광물 통제 논의를 자국의 산업발전과 기술주권을 제약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상무부는 2022년 10월 이후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 확보를 제한하기 위한 수출 통제를 도입했고, 2023년과 2024년에도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22] 발전권과 관련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전략적 통제와 선택적 완화가 병존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월 엔비디아 H200과 AMD MI325X등 일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 일정한 조건 아래 중국 수출허가를 사안별로 심사하도록 정책을 완화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제약받지 않는 발전권을 용인한 것은 아니다. 특히 군사용 인공지능, 양자기술, 극초음속 무기 등 군 현대화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출 통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안보 위험이 큰 영역은 계속 통제하면서 미국 기업에 이익이 되는 상업적 거래는 조건부로 재개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재조정한 것이다.[23]

이 네 가지 레드라인을 기준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하면, 미국의 대중국 접근법이 완전히 전환되었다기보다 경쟁의 목표는 유지하면서도 우선순위와 관리 방식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동맹 및 파트너와의 연대, 대만해협 현상유지, 인권 문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정 및 첨단기술의 군사적 이용 방지 등을 하나의 관리된 전략경쟁 틀 안에서 접근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무역·투자협의체, 희토류, 보잉 항공기 및 농산품 등 거래가능한 경제 성과를 전면에 배치했다. 물론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이번 정상회담을 미국이 중국에 양보한 거래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포기하지 않았고, 가치·동맹 중심의 관리된 경쟁에서 거래·억지·정상간 교섭에 기반한 전략적 안정 추구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충돌 위험은 낮추고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에 대한 공개적 문제제기와 집행 강도를 차등화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4대 레드라인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을 통해 미중 경쟁 속 '안보'와 '발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첨단기술을 군사력과 국가안보의 기반으로 간주하며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 한다. 반면 중국은 이를 자국의 발전권과 현대화 전략을 봉쇄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반도체, AI, 양자, 배터리, 희토류와 같은 분야는 더 이상 순수한

경제 영역이 아니다. 이들 분야는 미중 양국이 상대의 미래 권력 기반을 제약하거나 보호하려는 전략경쟁의 핵심 영역이 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과 첨단기술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국이 농산물, 항공기, 일부 비민감 품목은 거래할 수 있어도, 대만·체제·기술발전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 합의를 보였다. 따라서 '4대 레드라인'은 이번 회담의 한계를 설명하는 동시에, 향후 미중관계가 어떤 영역에서 계속 충돌할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결국 중국의 레드라인은 미중 경쟁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효과를 갖는다. 미국과 중국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있지만, 동시에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을 더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미중관계가 완화되기보다, 협력 가능 영역과 충돌 불가피 영역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전략환경과 우리의 대응

미중 경쟁의 심화는 한국의 전략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미중 갈등이 관세, 무역수지, 시장접근 문제에 집중됐다면, 현재의 경쟁은 반도체, AI, 배터리, 핵심 광물, 데이터, 조선, 방산, 금융제재, 해양안보로 확장되고 있다. 다시 말해 미중 경쟁은 무역분쟁에서 기술·공급망·안보가 결합된 복합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구조적 부담을 만든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 깊은 경제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소비재, 중간재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연계가 크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 투자 심사, 보조금 정책, 관세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환경은 더 이상 '미국 안보, 중국 경제'의 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반도체다. 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2.2% 증가한 1,73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반도체는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이었다.[24] 이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AI 수요와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중 기술경쟁의 압력을 가장 강하게 받는 국가 중 하나다.

핵심 광물과 희토류 역시 중요한 변수다. 중국은 희토류와 일부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공급망 취약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이 필수적이며, 이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과 미국 중심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한국은 2026년 2월 중국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협력 구상에도 참여하고 있다.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장기 경쟁 속에서 해군력, 물류, 정비, 상선·군함 건조 역량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한국의 조선업은 이러한 수요와 직접 연결된다. 방산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분야다. 미중 경쟁이 군사력뿐 아니라 산업기반 경쟁으로 확장될수록 한국의 조선·방산 역량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딜레마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안보와 경제의 분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반도체와 AI는 경제산업인 동시에 군사·정보·국가안보 기술이다. 둘째, 미국과의 기술·안보 협력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경제적 반발 가능성도 커진다. 셋째,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해도 미국의 수출 통제와 공급망 재편 압력이 한국 기업의 선택 공간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경쟁을 외부 변수로만 볼 수 없다. 한국은 미중 경쟁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 대상이면서 동시에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AI,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경쟁의 구조를 일부 형성하는 행위자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중 양국의 압력 사이에서 단순히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산업·기술·동맹 자산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다.

심화되어가는 미중 경쟁의 상황과 그로 인해 재편되는 전략환경을 고려해 볼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대외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는 종종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기울지 않는 것, 또는 민감한 사안에서 입장을 유보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미중 경쟁은 경제·기술·안보가 서로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한 거리두기나 모호성만으로는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략적 자율성은 선택을 회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선택의 비용을 감당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한국이 특정 사안에서 미국과 협력하거나 중국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선택을 뒷받침할 산업역량, 외교적 설득력, 공급망 대안, 국내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기반이 없을 경우 전략적 자율성은 실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외교적 수사에 머물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첫째, 전략적 자율성은 산업·기술 역량에서 나온다. 반도체, 배터리, AI, 조선, 방산, 바이오와 같은 분야에서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가질수록 외교적 선택 공간도 넓어진다. 반대로 특정 시장이나 원자재, 장비,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한국의 자율성은 제약된다. 따라서 자율성은 외교적 중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안보 역량의 문제다.

둘째, 전략적 자율성은 동맹과의 조율 능력에서 나온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삼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대중 전략이 한국 기업과 산업에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수출통제·보조금·관세·투자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전략적 자율성은 중국과의 위기관리 능력에서도 나온다. 한국이 미국과 안보·기술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방치할 수는 없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경제와 공급망에 중요한 변수이며, 핵심 광물과 중간재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의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공급망 조기경보 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략적 자율성은 국내적 합의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미중 경쟁이 장기화될수록 한국의 선택은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 기술 통제에 동참하면 기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특정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면 단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략적 선택의 필요성과 비용을 국내 산업계와 국민에게 설명하고, 피해를 완화할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미중 사이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안에서 어떤 원칙과 역량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전략적 자율성은 중립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핵심 이익을 식별하고, 동맹과 파트너를 활용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국내 역량을 축적하는 종합적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정구연 교수는 현재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직 중이며, 미국 외교안보정책, 인도태평양 지역안보아키텍쳐, 해양안보, 회색지대 분쟁, AI 군사적 활용 및 거버넌스 등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현안을 주요 연구 주제로 한다. 2011 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UCL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동대학원 강사, 국립외교원 객원교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을 거쳤으며,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해군발전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1]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Historic Deals with China, Delivering for American Workers, Farmers, and Industry" (May 17, 2026).,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5/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ecures-historic-deals-with-china-delivering-for-american-workers-farmers-and-industry/

[2] Reuter, "Trump Leaves Beijing with few wins but warm words for Xi" (May 14, 2026)., https://www.reuters.com/world/china/trump-xi-set-second-day-talks-after-taiwan-warning-2026-05-14/

[3] 연합뉴스, "中 '4 대 레드라인'제시…"과거의 중국 아니다"" (2026. 5. 14.)., https://www.yna.co.kr/view/MYH20260514009600038

[4] Reuter, "Trump says he discussed Taiwan arms sales with Xi Jinping, decision soon" (May 15, 2026).,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trump-says-he-discussed-taiwan-arms-sales-with-xi-jinping-decision-soon-2026-05-15

[5] Focus Taiwan, "U.S. Taiwan policy unchanged after Trump-Xi summit in Beihing: Rubio" (May 14, 2026)., https://focustaiwan.tw/politics/202605140028

[6]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Historic Deals with China, Delivering for American Workers, Farmers, and Industry" (May 17, 2026).,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5/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ecures-historic-deals-with-china-delivering-for-american-workers-farmers-and-industry/

[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sident Xi Jinping Holds Talks with U.S. president Donald J. Trump" (May 14, 2026)., https://www.fmprc.gov.cn/eng/xw/zyxw/202605/t20260514_11910330.html

[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eople's Republic of China, "Briefing by Foreign Minister Wang Yi on China-U.S. Summit and Common Understanding" (May 15, 2026)., https://www.fmprc.gov.cn/eng/wjbzhd/202605/t20260516_11911719.html

[9] Reuter, "US to seek public comment on Chinese goods eligible for tariff cuts" (May 27, 2026).,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us-seek-public-comment-chinese-goods-eligible-tariff-cuts-2026-05-26/

[10] Reuter, "Trump leaves Beijing with few wins but warm words for Xi" (May 15, 2026)., https://www.reuters.com/world/china/trump-xi-set-second-day-talks-after-taiwan-warning-2026-05-14/

[11] Reuter, "China says rare earth controls lawful, will cooperate with US on 'reasonable concerns" (May 20, 2026).,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china-says-rare-earth-controls-lawful-will-cooperate-with-us-reasonable-concerns-2026-05-20/

[1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hina and the U.S. Agreed to 'Strategic Stability' in Beijing. They Don't Define it the Same Way," (May 18, 2026)., https://www.cfr.org/articles/china-and-the-u-s-agreed-to-strategic-stability-in-beijing-they-dont-define-it-the-same-way

[13] 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 "Joint U.S.-China Statement" (October 29, 1997)., https://1997-2001.state.gov/regions/eap/971029_usc_jtstmt.html?safe=1

[14] 문화일보, "美-中, 테러 공동 노력 합의"(2001. 10. 19)., https://www.munhwa.com/article/10334753

[15] 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September 21, 2005) https://2001-2009.state.gov/s/d/former/zoellick/rem/53682.htm?safe=1

[16]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ter Bilateral Meeting" (June 8, 2013).,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3/06/08/remarks-president-obama-and-president-xi-jinping-peoples-republic-china-/

[17] The White Hous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act Sheet"(January 15, 2020).,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phase%20one%20agreement/Phase_One_Agreement-IP_Fact_Sheet.pdf

[18] US Embassy in Singapore, "Readout of President Joe Biden's Meeting with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vember 15, 2022)., https://sg.usembassy.gov/readout-of-president-joe-bidens-meeting-with-president-xi-jinping-of-the-peoples-republic-of-china

[19] US Embassy & Consulates in Indonesia, "President Joe Biden's Meeting with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vember 16, 2023)., https://id.usembassy.gov/president-joe-bidens-meeting-with-president-xi-jinping-of-the-peoples-republic-of-china/

[20]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Historic Deals with China, Delivering for American Workers, Farmers, and Industry" (May 17, 2026).,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5/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ecures-historic-deals-with-china-delivering-for-american-workers-farmers-and-industry/

[2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sident Xi Jinping Meets with U.S. President Joe Biden in Lima" (November 17, 2024)., https://www.fmprc.gov.cn/mfa_eng/xw/zyxw/202411/t20241117_11527672.html

[22]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Commerce Strengthens Export Control to Restrict China's Capability to Produce Advanced Semiconductors for Military Applications" (December 2, 2024)., https://www.bis.gov/press-release/commerce-strengthens-export-controls-restrict-chinas-capability-produce-advanced-semiconductors-military

[23] Reuter, "Nvidia AI chips sales to China stalled by US security review, FT reports" (February 4, 2026)., https://www.reuters.com/world/china/nvidia-ai-chip-sales-china-stalled-by-us-security-review-ft-reports-2026-02-04; Reuter, "US adds dozens of Chinese entities to export restriction list, including Inspur units" (March 27, 2025)., https://www.reuters.com/world/us/us-adds-dozens-entities-export-restriction-list-2025-03-25; AP, "US adds Chinese tech firms to its export control list, says they sought US knowhow for military use" (March 26, 2025)., https://apnews.com/article/china-us-sanctions-entity-trump-inspur-44c6a0fd445814a4b5fa40c7baa178ca

[24]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Korea's Annual Exports Reach New Highs in 2025" (January 2, 2026)., https://www.korea.net/Government/Briefing-Room/Press-Releases/view?articleId=8461&insttCode=&type=O&utm